

지방대 위기 극복 '맞손'...광주 민관협의체 뜬다

광주시·교육청·17개 대학 8일 업무협약 맺고 대학발전 협력단 출범 신입생 모집·학사 운영에 취업까지 공동 대응...전문가위원회도 발족

신입생 정원 미달 등 지역 대학 위극복을 위한 광주 민관 협의체인 가장 대학발전 협력단이 출범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장, 광주시교육감, 17개 대학 총장이 모여 오는 8일 대학발전 협력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광주 11개 종합대학, 7개 전문대학 가운데 호남신학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참여한다. 광주에는 종합대학 11개, 전문대 7개 등 18개 대학에 8만 450여명이 재학 중이다.

협력단은 이날 중 시와 시교육청 공무원, 대학 등 파견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력단은 대학의 위기를 지방 자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까지 전 과정에서 기관별 정책과 지원을 총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하게 됐다. 또 광주시 10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학 지원 관련 27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하고, 교육청, 대학과 연계해 업무 효과는 물론 지원 범위 등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학발전 협력단의 활동이 정착되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장 '지역 대학 위기대응 전문가 위원회'도 발족한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대학발전 협력단의 활동을 조인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이처럼 손을 맞잡게 된 것은 '지역대학 위기=지역 위기'라는 공통 인식 때문이다. 시는 지역 대학의 폐교가 이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 대학 일자리 감소, 젊은 인재 유출에 따른 인재 양성과 연구 기능 미흡 등으로 이어져 지역 산업과 경제가 황폐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

96.67%, 조선대 97.1%, 호남대 90.0%, 광주대 90.4%, 동신대 92.3%다.

광주시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실리콘밸리를 견인했고, 영국 등지에서 지역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관련 학과 개설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학의 발전을 교육부 등

중앙 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다고 판단해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함께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산업 등과 접목한 학과개설 등을 포함한 전문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우수 인재들까지도 광주를 찾아오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 실제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지역 거점대인 전남대까지도 일부 학과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수도권 인재 유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했다.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전남대



"불법 현수막 이제 그만" 신규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으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도로변에서 수거해온 현수막을 폐기처리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4명 사상' 광주 주택 붕괴사고 원인·안전조치 여부 수사 착수

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와 탐문 수사를 통해 주택 붕괴 원인 및 안전 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여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본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전날 발생한 사고는 낡은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 중 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목재 배대와 기와지붕은 남기고 나머지 구조물을 철거해 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H'빔으로 목재 배대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중이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생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동안 내린 비가 무게 균형을 무너뜨렸거나 구조물 붕괴를 일으켰을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10분께 발생한 사고로 인해 리모델링 업체와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4명이 잔해에 매몰됐다. 119구조대가 매몰자를 구조했으나 2명은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기소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A(48)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A씨 딸 B(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행위이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A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A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B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남편 C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린 일본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활동 단체 2017년 광주시 명예시민증 받아 한·일 역사 화해와 연대 의미

한국사 교과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이 처음으로 실리게 됐다. <사진>

특히 교과서에 실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이하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등은 지난 2017년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하 근로정신대)에 따르면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국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3종(해냄에듀, 동아출판, 천재교육)에 '나고야 미쓰

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이하 나고야소송지원회),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등 일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소개됐다.

'해냄에듀' 한국사 교과서(312쪽)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태평양전쟁 때 강제동원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이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돕고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로 소개하고 있다.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302쪽)에도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사례와 함께 일본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매주 금요일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활동내용이 실렸다. 또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312쪽)를 통해 2012년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의 '호쿠리쿠

연락회' 회원 등이 일본 도쿄에 있는 전범 기업 앞에서 진행한 집회를 소개하고 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33년 전인 1998년부터 한국에 사는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소송을 권유하고, 소송비용과 항공료, 체류비를 지원하는 등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시민사회 단체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은 광주지역 활동가들이 근로정신대 모임을 조직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두 단체는 10여년 넘게 돈독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근로정신대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일본 시민단체 활동을 소개한 소식을 접한 '나고야 소송 지원회' 고이데 유타카 사무국장은 "이번 소식이 우리단체 활동에는 큰 격려가 될 것 같



다"면서 "한일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더욱 진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